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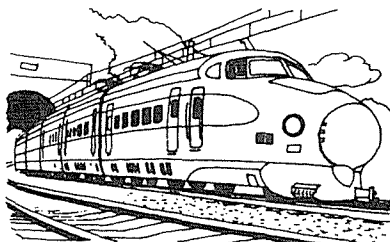
새정부 출범과 석유산업

金 柱 憲

〈석유협회 홍보과 대리〉

세상은 변하고 있다.

「신한국건설」이라는 의욕적이고 힘찬 목표와 함께 문민정부시대의 막이 올랐다. 그리고 새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석유업계는 관련 부처인 동자부가 상공부에 흡수·통합되어, 새로 개편된 상공자원부 소속이 되는 등



적세지감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변화는 필요한 것이다. 발전도 퇴보도 아닌 정체는 퇴보에 가깝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은 진보를 전제로 한 변화이기에 기대도 자못 크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내걸었던 슬로건에 우리는 한결같이 허탈감을 느끼곤 했기에 이번 새정부에 거는 기대도 다소 조심스럽다. 더불어 정부가 확고한 신념으로 출발한 이상 이에 걸맞는 국민적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신한국창조를 위해 아무리 힘주어 부정부패척결이니 국가기강 확립이니, 경제회생을 외쳐봐도 당장 신한국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정유업계는 관련부처가 바뀜에 따라 비록 국내에너지정책의 기초는 예전과 같다 할지라도 상당

한 환경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동자부가 독립부처에서 추진해 온 제반 에너지 자원정책과 일정 「궤」라는 범위내에서 연계되어 온 석유관련 정책이 상공자원부로 흡수되더라도 에너지정책,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행정 및 관련산업의 지속성은

변함없는 기초 아래서 추진될 것은 분명하고 이제까지의 추진과정에서 노정됐던 갖가지 현안과제 역시 여전히 당면하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최근까지도 국제석유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안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에 대한 국제적인 사용규제강화추세 및 석유가스등 에너지원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역시 국가간의 첨예한 경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8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에너지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을 상회하는 추세는 지난 4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에너지수입액 자체가 국민경제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공급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적극적인 해외자원의 개발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급증하는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단기적인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은 물론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서둘러야 하겠다. 대외적으로는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에너지정책 추진이 더욱 가시화되고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에너지산업 자체의 경쟁력제고 측면에서는 에너지 가격구조 및 관리체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율성제고로 경쟁축진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공·사기업 스스로가 단기적인 대응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세계시장의 개방화추세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에너지·자원정책이 통상 및 무역의 그늘에 가려서 「庶子」위치로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장기적 비전 아래서의 안정적 수급,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더욱 강화된 수요관리 및 지구환경과 조화되는 에너지정책의 보완 등이 더욱 높은 강도를 지닌 정책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석유업계는 유가자유화, 허가자유화, 상표표시제, UR협상에 따른 시장개방등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시점에 있어 동자부의 상공자원부로의 흡수통합은 석유산업자체를 개방화·자유화 추세로 더욱 가속화시킬 것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새로 개편된 상공자원부는 상업, 공업, 에너지부문을 총망라하여 가시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에너지 부문만 전담하던 동자부와는 그 시각이 많이 다르다. 또 그동안 해외기관과의 교류가 많고 국제적인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개방화, 자유화 분위기는 내부 깊숙히 상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석유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통제가 가장 많았고, 한편으론 환경변화에 가장 둔감한 업종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런 상반된 여건 속에서 정부와 업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융화될 수 있어야 한다. 개

방화, 자유화 물결은 이미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밀려와 있으나 석유산업이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제를 전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쟁은 필요한 것이지만, 과당경쟁은 모두가 자멸의 길로 가기 때문이다. 업계는 선의의 경쟁으로 국제화 시대에 상응하는 자구적노력을 해야 하며 새정부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즉 정유업계는 스스로 원유수입에서부터 정제과정까지 생산비를 절감하고 코스트를 낮춰 이윤을 창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물류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 유통경비를 줄이고, 또 대리점이나 주유소에서 다각경영을 모색하여 이윤창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런 일들은 업계가 정부에서 벗어나 추구해야 하는 업계 스스로의 몫이다.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정부이다.

통제경제에 익숙해 있던 업계가 개방화, 자유화됨에 따라 외국기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와 싸움에 필요한 탄알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런 준비를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한 방안에는 업계가 주장하는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싸움에 나가서는 자력으로 싸워야겠지만, 싸움에 임하기전까지는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미리 길러 주는 것은 정부의 몫인 것이다.

에너지정책은 한나라 경제전반, 국민전체에 그 영향이 파급되는 만큼이나 강력한 국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비상시에 대비한 석유비축시설 확충과 장거리 송유관 건설, 급증하는 천연가스 수요에 대비한 LNG의 안정적 확보 및 전국 공급망 사업 추진, 에너지 및 자원의 장기적 확보를 위한 해외개발·활용등과 같이 대규모적이고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산적한 분야가 바로 에너지정책분야이고 보면 그만큼 걸림돌도 많아 당면한 과제부터 하나씩 풀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새로 시작한 새정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향후 5년간의 기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분야에 걸쳐 21세기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